

## 규제개혁 관련 국정과제회의

규제 집행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도 중요. 이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

규제 집행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도 중요합니다. 단속법규의 경우, 제대로 실행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없애야 합니다. 지키면 손해고 안 지키면 이익이 되는 규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사전에 규제의 적절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학이나 행정학 전문가들을 규제 관련 기구에 배치해 규제를 없애거나 신규 규제를 만들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사전에 엄밀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 민원인들이 쓰는 시간과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규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간단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면 규제가 있어도 규제로 느끼지 않습니다. 규제를 이행하는 과정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을 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등은 반복해서 요구하지 않아야 하고 생략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전문가를 배치해 원-스톱으로 민원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개혁은 국민, 특히 기업하는 사람이 불편해 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 민원창구로 들어온 것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체계

화해서 과제를 설정하고 여기에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해서 여론이 나쁘고 민원이 많은 것부터 집중적으로 해결하도록 합니다.

규제 관련 협의체 만드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규제개혁위와 정부혁신위, 국민고충처리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 등 각종 민원창구로 구성되고 (사후의 감사를 의식한 규제과잉의 문제가 있으므로) 감사원도 참여하는 기구를 검토해 주십시오.